

# 동북아 FTA 정책과 남북경제공동체

김 영근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서론

최근 세계경제 지도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WTO 전략과 함께 보다 개방화된 지역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s)의 공백지대로 불릴 정도로 지역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정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FTA 교섭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FTA 추진 전략도 다극화된 세계 경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경영리스크 관리는 물론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추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의 통상 정책에 있어서 대북·중·일 FTA 정책을 검토하고, 나아가 FTA 추진의 정책 요인과 추진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남북경제공동체 구상 방안을 포함한 동북아경제공동체 추진 전략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절에서는 한일 FTA의 정책 요인과 추진 전략 분석, 제2절에서는 한중 FTA의 정책 요인과 추진 전략 분석, 제3절에서는, 남북 FTA의 추진 전략 분석을 점검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제4절에서는 한국의 대동북아 FTA 정책의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일 FTA의 정책 요인과 추진 전략

### 한일 FTA 추진 의미와 배경

한일 FTA는 2005년 타결을 목표로 상품과 투자,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자유화를 추구하여 왔다<sup>1)</sup>. 또한 한일 FTA 논의는 상호인증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조화 등 WTO보다 진일보한 조화와 협력을 꾀하고, 투자촉진, IT·과학기술협력, 중소기업 협력 등 제반 경제협력의 제도화까지 망라하는 매우 심도 깊고 포괄적인 지역무역협정을 목표로 전개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19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행동계획'을 통해 5개 분야 43개항에 달하는 최초의 포괄적인 한일협력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교섭이 개시되었다. 1999년 3월에 "한일 경제협력 의제

1) 일본의 EPA 추진전략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연계협정)는 특정 2국간 또는 복수국간에 해당 지역의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의 자유화 및 원활화 실현을 위한 국경 및 국내 규제 철폐, 각종 경제제도의 조화 등 폭 넓은 경제 관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이다.

21"을 통해 기존의 경제협력 범위를 넘어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자는 요지를 표명하였고, 2000년 5월 서울에서 제1차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 해 9월에는 동경에서 제2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01년 3월에는 한일 비즈니스 포럼 양측 포럼위원을 구성, 그 해 9월과 이듬해 1월에 걸쳐 1, 2차 비즈니스 포럼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후 2002년 3월 고이즈미 총리 방한 당시에 양국 정상이 업계, 정부, 학계가 참여하는 산, 관, 학 합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그리고 2003년 12월 22일 동경에서 제9차 한일 쌍무적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본 협상을 통해 BIT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대표가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03년 12월 한일 FTA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4년 11월 6차 협상까지 진행했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일본은 중국이 ASEAN과의 FTA 협정을 선언한 후, 동아시아지역주의를 선도하려는 전략에 대응하면서 역내 자유 비즈니스권 구축을 목표로 멕시코, ASEAN 제국 등 자국산업에 피해가 적은 교역파트너와의 FTA를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FTA 우선 체결을 목표로 교섭을 개시하였다. 신 다자간무역교섭(DDR: 도하개발라운드)이 정체됨으로써 WTO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대체 수단으로 FTA를 채택하였다. 또한 일본이 경쟁적으로 FTA에 몰입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일본보다 한발 앞서 아세안(ASEAN)과 FTA 체결을 추진한 중국과 인도 등 역내 라이벌의 존재가 작용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일본의 주요국과의 FTA 협상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동아시아 중심의 FTA 및 EPA 교섭을 추진해 왔던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한국은 경제체질 강화는 물론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화 전략 차원에서 일본과의 FTA를 추진하였다.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 속에서 한일 양국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아울러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상으로 한일 FTA 추진 배경을 검토해 보았다. 한일 FTA의 추진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일 양국이 FTA 추진에 있어서 똑같이 안고 있는 농업문제가 최대 과제로 양국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관세인하 이외의 양국 제도의 공통화를 통해 심도 있는 통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 한일 FTA 교섭의 정체 원인과 추진 전략

### 1) 한일 FTA 교섭의 정체 원인

한일 FTA의 추진 있어서 양국 정부의 실리는 명확하나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경제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적 배경으로는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들 수 있다. EU의 설립 배경에는 독일의 과거 2차 대전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과가 있었다는 점과 비교 하여 볼 때 두드러진 원인으로 지적 된다<sup>2)</sup>. 과거 청산에 미온적인 일본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상호공존전략을 구축

2) 일본 미즈비시 종합연구소의 설문조사("일본 EPA 전략~FTA·EPA에 관한 조사", 실시 기간 : 2005년 7월 11일~8월 1일, 1126명 대상) 참조

할 파트너로서 신뢰할만한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둘째, 경제적 배경으로는 한국의 대일 무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한일 FTA 체결로 인한 대일 무역적자가 확대되리라는 우려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의 영향을 고려한 소극적 입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일 FTA의 정체 원인은 일본의 FTA 추진전략에서도 그 차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 일본의 FTA 정책의 특징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첫째, 일본이 중시하는 FTA 상대는 동아시아 역내이며 특히 ASEAN을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삼아 왔다. 동아시아는 일본의 최대 무역상대지역으로 일본의 주요 경제 파트너이며, 최근에는 ASEAN 지역이 일본의 EPA 대상 지역으로 급부상하였다. 이는 ASEAN-중국, ASEAN-한국의 FTA 체결에 따른 일본의 FTA 정책 변화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일본은 공산품 위주의 FTA 추진이 두드러지며, 특히 농수산물 분야(농산물 부문 양허수준)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감안한 중간 수준의 FTA를 추진해 왔으며, 이는 한일 FTA 교섭에 있어서 정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본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연계된 EPA 추진에는 두드러지게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 왔다. 일본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① 2013년까지의 농산물·식품의 수출액을 1조 엔으로 증대, ② 2010년 까지 일반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참여)을 500사 규모로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구체적 논의와 시행이 연기되고 있는 정책으로는 ① 미국 및 EU와의 경제연계협정(EPA)의 검토개시 시기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② 과세강화 등의 농지개혁 논의를 연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 2) 한일 FTA 교섭의 추진 전략

이상의 한일 FTA 교섭의 정체 원인과 양국 FTA 추진정책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한일 FTA 교섭을 재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한국의 동북아 경제권 형성 전략에 관한 일본과의 인식공유가 필요하다. 특히 한일 FTA 타결을 위한 과제로는 한일 FTA를 둘러싼 양국 간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 FTA가 제품·부품의 표준화·공동화, 상호인증,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 조치의 계획적인 완화철폐는 물론 양국 내 지방경제 잠재력과 중국 시장·공장을 활용할 수 있는 한일 공동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만, 아시아 역내를 겨냥한 광역적,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한국의 단기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종래의 수직적 산업 내 분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통합을 촉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도 중단된 한일 FTA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이 동북아 허브(중심국가) 구상의 하나로써 동북아시아 물류센터를 목표로 대규모적인 물류단지 조성이나 물류산업의 국제(선진)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협조가 국제수준으로 필요한 물류와 같은 신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한일 FTA 추진이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중 FTA의 정체 요인과 추진 전략

## 한중 FTA 추진 의미와 배경

한중 FTA의 추진 목표를 살펴보면, 중국은 한국과의 FTA를 통하여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새로운 영향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왔다.

한중 FTA 추진 배경은 한중간의 현안으로 중국의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지속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이 높아 해결방안으로서 FTA가 대두되어 왔다<sup>3)</sup>. 특히 중국은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로, 시장 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역내의 정치·안보적 전략차원에서 한중 FTA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sup>4)</sup>. ‘비전 2030 민간작업단의 기초분석보고서’(2007.4.9)에 따르면, 한중 FTA의 추진의미는 동북아에서의 경제협력이 단순한 경제적 이득 뿐 아니라 군사·안보적 긴장해소의 효과도 기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통상 정책과 FTA 교섭 추진 현황을 보면, 중국은 한미 FTA 타결 전까지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FTA를 추진하여 왔다. 중국의 FTA 추진전략이 국가(지역)별로는 인접지역과 개도국 우선이고, 동기에서는 에너지자원 확보,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과 같은 전략적 요인이 우선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주요 협상분야와 관련하여 중국의 FTA 협상 전략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 삭감·철폐 유예기간을 정하며, 관세삭감 일반 규율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민감 품목의 구체적인 리스트를 인정한다. 둘째, 투자보장, 지식재산권, 환경표준, 경쟁정책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보다는 상품무역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FTA를 선호하고 있다. 셋째, 국내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신시장 개척 및 자원협력 강화 방향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타결 후의 중국의 대한 FTA 정책변화가 두드러진다.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 속에서 한중 양국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아울러 일중간의 경제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도 일본과 함께 아시아 최대의 경제권이며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을 주요 FTA 대상국으로 검토해 왔으며, 또한 경제체질 강화는 물론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화 전략 차원에서 중국과의 FTA를 추진해 왔다. 다만 한국이 한미 FTA와 한-EU FTA의 우선 추진이라는 통상 정책의 기조 변화로 한중 FTA 추진은 정체라기보다는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한중 FTA 교섭의 정체 원인과 추진 전략

### 1) 한중 FTA 교섭의 정체 원인

3) 최원기 『중국의 한·중 FTA 추진 배경과 한·중 FTA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6년.

4) 이장규, 이인규, 여지나, 조현준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년.

한중 FTA의 추진 있어서 한중 관계의 패러다임 변화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과거와 같이 중국의 저렴한 임금을 이용한 상호 보완적인 분업 구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쟁 관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한중 FTA가 정체되고 있는 이유를 정치적·경제적 배경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자.

첫째, 정치적 배경으로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는 역내에서의 안보 딜레마 해소와 영향력 증대(주도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FTA를 적극 활용한다는 데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특히 북한 요인(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중 양국의 위기관리 메커니즘과 통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둘째, 경제적 배경으로는 양국관계의 외형적 급성장의 주된 한중 FTA 추진의 동력이나, 산업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경제적 동기는 미흡하여 투자와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한중 FTA의 정체 원인은 중국의 FTA 추진전략에서도 그 차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FTA 정책의 특징은 중국이 한국과의 FTA에서 한국이 우려하는 농산물제외라는 카드로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두드러진 FTA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중국이 기대하는 FTA 추진 동기는 한국시장의 확대, 대선진국 우회수출 등의 경제적인 측면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중국투자의 한국 진출(우회생산)을 통한 미국 수출이라는 한미 FTA의 효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또한, 한중 FTA를 체결후, 농산물을 포함한 전체 제품의 관세가 사라질 경우, 궁극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구조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형태여서 중국 제조업 생산품의 수입은 곧 한꺼번에 세계시장에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sup>5)</sup>.

한편 한국의 대중 FTA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GDP 추가증가율이 3.2 퍼센트에 이를 것이라며 중국과의 FTA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중FTA의 우선순위는 한미 FTA나 한EU FTA에 비해 뒤로 밀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추진 전략에 있어서, 양국은 역외국가, 특히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성 크다는 점에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선점효과 및 추가적인 한중 FTA를 통한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와 정치 문제가 연계성을 띠고 있다는 점 또한 한중 FTA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 대만문제, 일중간의 세력균형 문제 등 냉전구도가 잔재하고 있어, 이에 관한 논의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2) 한중 FTA 추진 전략

한중 FTA 교섭 개시의 전제조건은 한일 FTA 추진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동북아 경제권 형성 전략에 관해서 중국과의 인식공유가 중요하다 하겠다. 동북아 통합을 촉진시켜 나가

5) 한중 양국은 모두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발전 속도가 달라 상호보완성이 크다는 전망이 대부분이지만, 이는 '한·중 FTA민간연구 결과보고서'의 2001년 통계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통계자료의 한계 및 분석자체의 한계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한중 FTA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 또한 공통요소이다.

한중간에는 이미 자유무역협정이 없어도 무질서한 무역자유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오히려 현재의 무질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FTA 추진을 논의해야 할 당위성도 존재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정치과정(선호)에도 반영되어 있다. 중국기업의 한중 FTA 인식에 관한 KOTRA의 설문조사에 의하면<sup>6)</sup>, 중국 기업의 한중 FTA에 대한 지지율이 93.8%에 달하고 이중 절반 이상(56.7%)의 기업들은 “당장 협상을 시작하자”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동북아시아 FTA 체결 우선순위에 관해, 한중 FTA 우선(59.0%), 한중일 FTA 동시(29.2%), 중일 FTA 우선(10.1%) 순으로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

한중 FTA 타결을 위한 과제로는 한일 FTA 추진에도 적용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sup>7)</sup>의 극복이 중요하다 하겠다. ‘스파게티 볼 효과’란 예를 들어 FTA가 확산·중첩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가게 되어 경제비용이 늘고 총체적으로 자유무역질서(WTO)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거래비용절감과 무역창출효과를 장점으로 하는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복잡한 수출입 규정(원산지 규정 등)으로 혼란과 높은 행정비용 등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 제반 수출여건에 대한 통일안을 만들어 FTA를 추진한다면 무역에 따른 거래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어 FTA의 기대효과를 반감시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세계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협상 타결로 높아진 협상력과 경험을 활용하며, 동일한 조건을 통해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을 추진함으로써, ‘스파게티 볼 효과’를 극복하며 ‘한국식 스파게티 볼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의 입지 축소와 양극화 현상의 심화 등의 문제는 단순히 FTA 추진에서 초래되는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자유무역 확립 과정의 부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 남북 FTA 및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전략 및 과제

- 6) KOTRA는 최근 중국 7대 도시 17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기업의 한중 FTA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 관해서는, KOTRA 『중국기업의 한중 FTA 인식과 전망』 (Global Business Report 07-015), 2007년을 참조
- 7)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자그디시 바그와티 교수는 FTA의 과도한 체결로 상이한 협정 내용이 한데 섞여 FTA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스파게티 볼 효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Jagdish Bhagwati. (1995), “U.S. Trade Policy: The Infatuation with Free Trade Areas,” in Jagdish Bhagwati and Anne O. Krueger, *The Dangerous Drift to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The AEI Press: pp. 1-18.; Bhagwati, Jagdish, David Greenaway, and Arvind Panagariya, (1998), “Trading Preferentially: Theory and Policy,” *The Economic Journal*, 108: 1128-1148.; Jagdish Bhagwati, (2003), “Testimony, Subcommittee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Monetary Policy, Trade and Technology, U.S. House of Representatives,” Tuesday, April 1.

## 추진 전략

‘2007남북정상선언’으로 본격적인 남북 경협 활성화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었다. 특히 남북 양측은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기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행 구체화는 물론, 경협의 제도화와 남북한 교류의 보다 포괄적인 추진 등에 합의함으로써, 향후의 남북 경협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경협 확대를 위한 투자 장려, 각종 우대 조치와 특혜 우선 부여 등의 합의 도출은 남북한 FTA 및 무관세를 염두에 둔 경제공동체 실현의 제도적 장치 마련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FTA 및 대체 자유무역협력체 구상에 관한 논의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남북간 무관세 거래의 국제적 인정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이보다 낮은 단계로 중국과 홍콩이 체결한 바 있는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는 구상들이 제기되어 왔다<sup>8)</sup>.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대비해 남북 간 무관세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분야별, 사업별로 분산돼 있는 경협관련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남북경협을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면 남북 간 1국내 2개 독립관세구역간 FTA인 CEP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sup>9)</sup>.

세계무역기구(WTO)는 원칙적으로 가맹국간 FTA만 인정하고 있지만 유럽자유무역지대의 경우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FTA를 인정한 예도 많다. 이 때문에 남북 간 CEPA를 체결하는 경우 국제통상법적으로는 WTO의 예외적 조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또한 핵문제 해결 전망이 밝아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의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북한의 국제금융·무역체제 가입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북핵 비핵화 2단계 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의 요청에 의해 열리게 된 북미 금융실무그룹회의(11.19~20)에서,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국제금융 체제에서의 공인된 규범과 기준, 북한이 국제금융 시스템에 편입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이 중점 논의되었다. 북한은 BDA 해결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노출한 점을 감안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개발은행) 등 국제금융체제에 편입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론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의 WTO 가입 교섭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sup>11)</sup>.

8) 임수호·동용승,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의의와 가능성.”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원, 2007. 8

9) 전개논문

10) 예를 들어 중국과 홍콩은 2003년 6월 상품·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와 무역·투자의 편리화 조치를 매년 확대하는 포괄적 FTA인 CEPA를 체결한바 있다.

11) 베트남은 1995년 1월 WTO 성립과 가맹신청 후, 12년에 걸친 2국간 교섭 및 다국간 협의를 통해

## 추진 과제

향후 북한의 국제금융·무역체제 복귀에 따라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은 물론, 남북한 FTA, 혹은 CEPA에 관한 논의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를 위해서 북한은 다음 3가지가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첫째, 한미 FTA, 한일 FTA, 한중 FTA 등 한국이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FTA(지역경제통합)를 추진함에 있어서, 남북경제협력(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의 중요성을 남북 간에 서로 인식하는 점이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다만 한국의 대북 FTA 정책에 대한 미국, 중국, 일본의 지지가 관건으로, 북한 당국은 WTO 국제규범에 맞게 내부의 법·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특히 국내제도 개혁을 통해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행동 준칙의 능력을 증진시켜 나아가는 것이 국제무역체제(WTO) 가입은 물론 지역협력체제(FTA) 진입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조속히 자유로운 통행·통신·통관의 3통 보장과 4대 경제협약의 실제적 발효 등을 통한 남북 경제의 제도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의 구체화는 물론, 경제협약의 총리회담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경제공동위 산하 6개 분과위(개성공단, 철도, 도로, 농수산, 조선해운, 보건·의료·환경)에서 논의가 구체화되고 이행될 경우, 남북 FTA나 CEPA 체결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북미·북일·북중 관계와 2007남북정상선언(10.4)과 같은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적 진전 계기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발언권이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현실에서는 적극적인 북미 관계 정상화 교섭을 통해, 북한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여야만 국제기구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 결론: 한국의 대동북아 FTA 정책의 시사점과 전망

한일·한중·남북 FTA 체결의 당위성은 한국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 세계화의 대세 등에 있으며, 예상되는 국내 경쟁력 취약 부문도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한국·중국·일본 간 FTA를 체결한 뒤 관세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의 통합시장을 추구해야 한다. 동북아경제협력체는 시장 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역내의 정치·안보적 긴장관계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FTA가 체결된 현재, 주변국과의 협력관계가 동반되었을 때 FTA의 경제적 실익의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FTA 성공사례의 공통점은 첫째, 국내경쟁이 촉진 된다는 점, 둘째, 자유무역 이외에 협력이 존재한다는 점, 셋째, 경제교류에 실체가 있는 FTA가 정치적으로도 플러스가 된다

---

2006년 11월 7일 가맹승인을 얻어 150번째 가맹국이 되었고, 중국의 경우에는 15년이 걸렸음. 다만 북한의 경우, 북핵 해결 후에는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교섭을 통해 국제기구 가입 지원이 단축 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지역과의 역내협력을 위한 신속한 FTA 추진의 필요성과 일치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 및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중국과 일본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동아시아 경제협력틀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춧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동남아시아지역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파트너이며 특히 동남아시아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무역수지흑자를 가져다주는 지역이므로 ASEAN+3 FTA의 전략적인 추진을 통해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나가야 한다<sup>12)</sup>.

---

12)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에 관해서는, 김종걸·정하용, “한미FTA와 동아시아 경제협력,” 『한국형 개방전략: 한미FTA와 대안적 발전모델』 창비, 2007년, 57~97쪽을 참조

## < 요약 >

최근 세계 경제 지도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WTO 전략과 함께 보다 개방화된 지역협력체제(FTA) 구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FTA의 공백지대로 불릴 정도로 지역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정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FTA 교섭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의 대북·중·일 FTA 추진 전략도 다극화된 세계 경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경영리스크 관리는 물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추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의 통상 정책에 있어서 대북·중·일 FTA 정책을 검토하고, 나아가 FTA 추진의 정제 요인과 추진 전략을 분석하였다. 첫째, 한일 FTA의 정제 요인으로는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요인과 대일 무역적자확대 우려라는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중 FTA의 정제 요인으로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산업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경제적 동기미흡이 작용하였다. 셋째, 남북FTA의 추진 전략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FTA 및 대체 자유무역협력체, 즉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 구상 방안을 포함한 동북아경제공동체 추진 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한일·한중·남북 FTA 체결의 당위성은 한국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 세계화의 대세 등에 있으며, 예상되는 국내 경쟁력 취약 부문도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한국·중국·일본 간 FTA를 체결한 뒤 관세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의 통합시장을 추구해야 한다. 동북아경제협력체는 시장 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역내의 정치·안보적 긴장 관계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FTA가 체결된 현재,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가 동반되었을 때 FTA의 경제적 실익의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